



- **北, "사상전·선전선동 강화"…선전일꾼 독려(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2면에 '사상전, 선전선동의 위력은 당 선전일꾼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안효동 황해남도 배천군 당위원회 비서의 글을 싣고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 간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 신문은 "당 선전일꾼들은 당원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 교양 자이며 고무자"라고 내세움.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포전담당제 강화할 듯(1/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31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분조장대회 참석자들이 이날 평양에 도착해 광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등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함.
 - 그러면서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50돌이 되는 올해 열리는 농업부문 분조장들의 대회합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올 1월 공개활동 용가 軍(2/1,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모두 9차례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이 가운데 6차례가 군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 **北 김일성 부자 '컬러 조각상'은 김정은 아이디어(2/1,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지난해 최초로 선보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컬러 조각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호는 작년 7월 문을 연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홀에 김일성 주석의 '천연색 조각상'이 세워진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北,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방 선거위 구성(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3월 9일 실시할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를 각지에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가 조직돼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축하 분위기 조성(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1면에서 지난 1월17~23일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등에서 광명성절을 기념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의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2면 '인민의 그리움 끝없이 넘쳐나는 뜻깊은 2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1년 12월16일 주민에게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문건에 서명한 내용 등을 소개함.

■ 김정은동향

- 1/28,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 촬영(1.28,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황병서 참가
- 1/29, 김정은 黨 제1비서, 80번째 생일을 맞은 '리룡암'(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연구사)과 '정진창'(열공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생일상 전달(1.29, 중앙통신·중앙방송)
- 2/1, 김정은 黨 제1비서, 새해를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과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 발송(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국가주석(시진핑), 러시아·네팔·레바논·몽골·팔레스타인 대통령 등
- 김정은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 발송(2.1, 중앙통신)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을 현지요해(1.29, 중앙통신)
- 총리는 모든 건설자들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칠 것을 언급.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1.4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 중통)
-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2.1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 리철만·리무영(내각 부총리) 방문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바치고 있는 김정은 영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을 당부.



나. 경제

- **北신문 "먹는 문제 해결 위해 바다 잘 이용해야"(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 부문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1면에 실은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수산 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밝힘.

- **北, 농작물 우량종자 등록·생산 국가 관리(1/31, 연합뉴스)**
 - 북한이 우수한 농작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자의 등록과 생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농작물종자관리법'은 "국가는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도록 한다"고 규정함.

- **北 경제개발 '숨은 실세' 김철진 부상 주목(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0월 내각 소속으로 신설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김철진 부위원장(차관급)이 최근 경제개발의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2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철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해 9월 말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현장 시찰과 같은 해 12월 31일 완공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방문 때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다. 군사

- **軍 "북한군 동계훈련 진행중...특이동향 없어"(1/30, 연합뉴스)**
 - 현재 정상적인 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군사적으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현재 정상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이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신생 '햇불체육단' 두각... '체육열풍 주도'(1/27, 조선신보)**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인 이 체육단의 남자 축구팀은 창단 1년도 안 됐지만 주요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27일 조선신보가 전함.
 - 신보는 "작년 국내 축구애호가들 속에서 화제가 된 축구팀은 햇불팀"이



- **北, 설 맞아 전역서 축포 발사행사(1/30,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와 등은 이날 평양시에서 열린 축포발사 행사를 생중계하며 축포가 "뜻깊은 2014년 설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인민에게 보내는 축하인사"라고 밝힘.
 - 중앙TV는 김일성광장과 대동강유보도(강안도로), 주체사상탑 앞 광장과 모란봉기슭을 비롯한 시내의 여러 곳에는 축포 발사 관람을 위해 수 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고 전함.

- **北, 전역서 설 행사·민속놀이...경축 분위기(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14년 설을 맞아 전역의 주민과 군인, 청소년 학생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평양시민이 만수대 언덕과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등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았고 원산, 강계, 함흥 등 각 도 청 소재지에 세워진 동상에도 주민들의 참배 행렬이 잇따름.

- **北, 교육혁신 추진...대학에 '복수전공제' 도입(2/2,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호는 '조선의 우수한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새 세기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학 등 고등교육부문을 "제2전공제를 실시하며 교육사업의 과학화·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힘.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아태지역 美 무력증강은 신냉전 초래"(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은 패권전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최근 일본에 스텔스 전투기 F-22를, 남한에 F-16 전투기를 각각 증강배치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은 지역에서 핵전쟁 위협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냉전을 몰아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며 미국이 군사적 우세로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함.

- **북한, 국경지대 靑중국파 3천명 산간으로 추방(1/27, 산케이신문)**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후 추종 세력 제거를 위해



국경 지대의 친(親) 중국과 3천 명 이상을 산간 지방으로 추방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장성택 추종자를 제거하기 위해 평양과 국경 지대에 파견된 적발단이 무역업자, 중국인을 상대로 한 호텔·카지노 종업원, 탈북자 가족 등을 체포·구속했으며 이와 별도로 3천 명 이상을 산간 지방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함.

● **北, 中 인접 평북 경제개발구 '시범모델'로 띄우기(1/27, 내나라)**

- 북한의 대외홍보용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27일 '평안북도가 경제지대(경제개발구) 개발을 진행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는 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강조함.
- 내나라는 특히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가 들어서면 신의주시를 소개하며 "신의주는 조(북)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 소재지로 나라의 경공업 산지이며 조중 변경무역의 중심지, 중국과의 무역상품 집산지, 무역 화물 유통중심지"라고 부각함.

● **北, 작년 중국산 곡물 수입 29만 8천t...5.9%↑(1/27, 연합뉴스)**

-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은 모두 29만 8천 257t으로 2012년 28만 1천 633t에 비해 5.9%(1만 6천 624t)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중국산 곡물을 중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밀가루가 52.3%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25.7%), 쌀(16.6%), 콩(5.1%)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2012년 1억 2천714만 달러(약 1천 378억 원)에서 지난해 1억 4천 601만 달러(약 1천 583억 원)로 14.8% 증가함.

● **중국, 두만강 北접경지역 관광·무역 활성화(1/27, 연변인터넷방송)**

- 27일 연변인터넷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과 북한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쌍무평(雙目峰) 임시 통상구의 개통을 승인하는 등 중국이 올해 들어 두만강 유역 북한 접경지역과의 관광, 무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베이징서 '김정은 신년사 설명회'...수교국 대상(1/27,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평양에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 수교국을 상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발표한 신년



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손무신 북한 외무성 본부대사는 이날 오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베이징 및 서울에서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수교국 대사들을 초청, 설명회를 한 것으로 인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혔으며 초청 대상국은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베이징 또는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는 80여 개국인 것으로 알려짐.

● 단둥-평양 열차, 하루평균 250명 이용(1/27, 중국신문사)

- 27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지난해 열차를 이용해 방북한 인원은 4만5천 249명, 방중한 인원은 4만6천748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평균 252명이 단둥-평양 열차를 타고 양국을 오간 셈이라고 보도함.

● 주북 中대사, 북중 친선모임 개최(1/27,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가 27일 설을 맞아 북한 외무성 직원들을 초대해 북중 친선 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에 필로폰 만연...중국거처 수출까지(1/28, LA타임스)

- 북한에 필로폰 밀조와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신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8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에서 몰래 만든 필로폰이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있으며 필로폰을 감기약이나 강장제처럼 사용하고 학생들은 밤샘 공부할 때 스스럼없이 필로폰을 복용하며, 심지어 배고픔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보도함.

● IOC, 北 소치 올림픽 출전 요청설 부인(1/28, 미국의소리(VOA))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소치 동계올림픽의 출전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함.
- IOC 대변인은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북한에 특별히 참가를 허용하는 와일드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동계올림픽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함.

● 北, 美 특수전부대 증강 계획 비난(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스쳐보낼 수 없는 특수전무력 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2001년 3만3천 명이었던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을 올해 7만2천 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며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범죄적인 특수작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이 대체로 특수부대 작전에서 시작됐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다름 아닌 특수무력"이라고 지적함.

● **북한-일본 당국자 베트남서 비밀 접촉(1/28, 아사히신문)**

- 북한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6~27일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는 6자 회담의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명이 하노이를 방문했고 2012년 8월 북한과 일본의 외교부 과장급 협의에 출석했던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이 같은 시기에 현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北, 日 교과서지침 비난... "침략 '돌격대' 양성 시도"(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음흉한 심보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제작 지침은 "일본 당국이 '독도 영유권'을 새 세대들에게 강제 주입해 군국주의를 고취하며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독도는 그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도, 넘겨다볼 수도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며 "우리 민족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적극지지... "기쁘다"(1/28,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북한이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제안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관련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가까운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교류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北암시장서 초코파이 개당 10달러에 팔려(1/28, CNN)**

- 미국 CNN방송은 뉴욕 주재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에르퍼 수석 부회장을 인용해 초코파이가 북한 암시장에 널리 퍼져 구매력 환산 기준 개당 약 10 달러에 유통되고 있다고 28일 보도함.



- **인도네시아에 북한 구권화폐 대량유입(1/29,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에 출처가 불분명한 북한의 구권화폐가 대량으로 유입, 환전 조직들이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자카르타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9일 한 인도네시아인이 북한 화폐에 대해 문의해와 확인한 결과 2009년 화폐개혁 전에 사용된 5천원권으로 확인됐으며 환전조직이 같은 종류의 화폐를 환전하기 위해 동포사업가에게 접근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힘.

-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북한, 연일 미국 비난(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조선반도에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몰아온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평양 공격을 염두에 둔 미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함.
 - 미국이 지난해에도 핵 항공모함과 B-52H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핵전쟁 소동"을 벌였다고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협의 가해자, 도발자"라고 몰아붙임.

- **北, 이번엔 베이징서 '중대제안 진정성' 선전(1/29, 연합뉴스)**
 -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주중 북한대사관이 중국주재 외신기자들을 대거 대사관으로 불러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남한 측에 제안한 '중대제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모두발언에서 "많은 나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대제안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중대제안'의 배경과 내용을 30여분간 설명함.

- **北중양통신-시리아 통신 협조합의서 조인(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와 시리아아랍통신사 간 보도자료 교환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30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공관 이전 재추진(1/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설치한 총영사관을 나홋카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함.
 -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전날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 일행이 지난 28일 시 고위 간부들을 만나 총영사관 이전과



관련한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힘.

● **북중 작년 교역액 65억 달러...사상 최대(2/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워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2%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1~12월 북·중 교역액은 65억4천500만 달러(약 7조162억 원)로 집계됨.

● **北 신문 "美, '중대제안' 시비말고 핵무력 철수해야"(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한 '중대제안'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은 제 할 바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글에서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험성과 핵위협을 언급한 데 대해 "여론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반박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 日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확정된 것은 '새 세대들에게 강제 주입하여 군국주의를 고취하며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1.28, 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美中 수석대표, 6자회담 재개조건 논의(1/27,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7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가진 미중 수석대표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지재룡 주중 北대사 "6자회담 재개 지지"(1/29,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및 외신 언론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지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



할 수 없다"면서 "조선(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공격 위협의 산물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 데이비스 美6자회담 대표 "비핵화 北 태도변화 기대"(1/29, 연합뉴스)
 - 미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아직 아무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힘.
 -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찾는 것은 북한의 진실성과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바로잡을 책임 南北 모두에 있어"(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민족우선, 민족중시 입장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한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바로잡을 근본 책임은 북남당국에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무모한 군사적 대결로 허송세일을 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북남당국은 시대와 역사 앞에 현 비극적 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안겨 주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
- 정부, '2월17~22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제의(1/27, 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통신은 정부가 통지문에서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함.
- 北, 서부전선 일대서 대남 빼라 살포중지 정황(1/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부전선 일대에서 대량으로 실시하던 대남 비방 전단(빼라) 살포 작전을 최근 일시 중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한군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실시하던 대 남 전단 살포 작전을 2주 전부터 중단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남측을 격렬하게 비난한 내용으로 작성된 뼈라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北 "南, 동족이 내미는 선의의 손 잡아야"(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선의에는 선의로 화답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며 "남조선 당국은 동족이 내미는 선의의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신문은 "대결감정의 해소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중상 및 적대행위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또다시 촉구함.
- **北,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중지요구 전통문 보내와(1/28,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오후 서해 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서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전통문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왔다"며 "북측은 우리 측에 정당한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오늘 오전에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의 답신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며 "전통문에는 해상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훈련으로 이로 인한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北 '2월 이산상봉' 무반응...내일 실무접촉 무산(1/28,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지는 우리 제안에 28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우리 정부가 상봉 준비를 위해 관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9일 열자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北 "군사행동 끊임없는데 관계개선 할 수 있나"(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적대행위는 북남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라며 한국 정부에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촉구함.
 - 신문은 동족을 "주적으로 대하면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삼는다면 조선



반도(한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시킬 수 없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할 수도 없다"라며 상호 비방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골자로 한 북한 국방위의 지난 16일 '중대제안'에 한국 정부가 호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함.

- **정부, 北에 독촉 통지문…"이산상봉 입장 밝혀라"(1/29, 연합뉴스)**
 - 정부는 금강산에서 내달 17~22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 제의에 북한이 사흘째 답을 주지 않는 것과 관련, 대북통지문 통해 조속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정부는 "북측이 우리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고도 상봉 행사 준비에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헤어진 가족들과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북측이 우리 측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北신문 "南이 남북관계 개선 행동 보여야"(2/1, 노동신문)**
 - 동신문은 1일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함.
 - 신문은 '실천행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하며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北, '공개서한'도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개 서한이 "1월 30일 유엔안보리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53호로 배포됐다"고 1일 보도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시범 가동 돌입(1/28, 연합뉴스)**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28일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가 오전 10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 51명 중 21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북측 출입국사무소(CIQ)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작년 남북 교역액 42% 급감…8년만에 최저(2/1,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으로 작년 남북 간 교역액이 42%나 급감하면서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남북 간 교역량은 반출 5억 2천



60만 달러, 반입 6억 1천 524만 달러로 총 11억 3천 584만 달러로 집계 됨.

■ 기타 (대남)

-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바로잡을 근본책임은 북남당국에 있다"며 북한 국방위원회 '대남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실현의 남북관계 개선 입장' 지속 강조(1.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며 '대결감정부터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당국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1.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외교부장, 北核겨냥 "문앞에서 말썽 허용 안해">(1/26, 연합뉴스)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 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중국과 북한은 일부 문제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며, 그중 하나가 핵프로그램"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또한 현재의 중북 양국 관계에 대해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 관계중 하나",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중 하나" 등으로 일반성을 지적했음.
 - 이외에도 왕 부장은 현재의 중일 갈등을 외교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중미관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면서 미국 또한 중국의 역내 이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 <데이비스 美6자대표 "北, 더 의미있는 조치 해야">(1/26, 연합뉴스)
 -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화해 움직임을 해 주길 바라며 더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최근 북한이 왜 태도를 부드럽게 하는 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의 화해 제스처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자신의 방중이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음.
 - 그는 오는 28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이며,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지재룡 주중 北대사 "6자회담 재개 지지">(1/29,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및 외신 언론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는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선행 포기가 아니라 동시행동을 통해 조선반



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주장했으며,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것이지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지난 16일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제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

● <美정보 총책임자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1/30, 연합뉴스)

-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에 대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음.
- 또 북한이 아직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실험을 위한 배치 초기 단계이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음.
- 클래퍼 국장의 증언은 북한이 영변의 5MW급 가스 흑연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 가동을 위한 연료생산에 들어갔다는 미국 내 싱크탱크의 분석 등과 일치하며, 앞서 우리 정보 당국도 북한이 2007년 폐쇄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점을 확인한바 있음.

나. 마·북 관계

● <美의회보고서 "대담해진 김정은, 더욱 도발적 행동">(1/26,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대미 관계, 핵 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성택 처형을 통해 대담함을 과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앞으로 더욱 도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 보고서는 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엘리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여파를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음.
- 이어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민주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 목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위협으로 점철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의 목표 성취는 말할 것도 없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규정하는 것조차 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음.

●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북한, 연일 미국 비난>(1/29, 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29일 미국이 한미군사연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미 비난을 이어갔음.
- 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증강으로 신냉



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28일에는 미국의 특수전 무력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푸에블로호 나포 46주년인 지난 23일에는 미국이 '도발 책동'을 계속한다면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 북한이 연일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올해 들어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美 "北과 직접 접촉...킹특사 당장 방북계획 없어">(1/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국무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1년 이상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 중이지만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이는 미국 정부가 미·북 교섭을 전담하는 '뉴욕 채널'을 통해 킹 특사 방북을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 교도통신은 전날 킹 특사가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지난 주말 만나 배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장 차석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주영 北 대사 "케네스 배, 형기 다 채워야 석방">(1/31, 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영국 스카이뉴스(Sky News)와 인터뷰를 인용해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는 15년의 노동교화형 형기를 다 채워야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현 대사는 배씨의 사면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최근 배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이른바 '인도적 처우'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배씨가 형기를 다 채우면 그를 석방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음.
- RFA는 현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 베이징서 '김정은 신년사 설명회'...수교국 대상>(1/27, 연합뉴스)

-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에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 수교국을 상대로 올해 발표한 신년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초청 대상국은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베이징 또는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는 80여 개국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참석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20여 개국이 초청에 응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한 소식통은 "특별한 것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발표한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한 선전공세 등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북한-일본 당국자 베트남서 비밀 접촉">(1/28,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북한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6~27일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측 6자 회담의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등 3명이 하노이를 방문했고,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이 같은 시기에 현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신문은 참석자 가운데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 오노 게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있었다고 전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내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대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평가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은 일절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음.

● <北, 日 교과서지침 비난... "침략 '돌격대' 양성 시도">(1/28, 연합뉴스)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신세대를 해외 침략의 '돌격대'로 양성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음.
- 이어 "독도는 그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도, 넘겨다볼 수도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며 "우리 민족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도 이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만 장악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을 손쉽게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반동들의 이러한 독도강탈 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데이비스 "北, 태도변화 아닌 구체적 조치 필요">(1/29,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외교부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필요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그것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내용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조태용 본부장은 "우리는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토대 위로 6자 대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번 방문은 케리 국무부 장관의 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케리 장관의 내달말 방한 가능성을 확인했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적극 지지... "기쁘다">(1/2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8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기쁘다'는 표현을 쓰며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 이어 "상대방이 보낸 선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정세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한국의 '日침탈역사 국제공동연구' 지지">(1/29,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역사문제에서 서로 통하거나 서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다'며 "한중 모두 일본이 반드시 역사를 정시하고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그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군위안부,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역사 역주행'을 강렬히 비난했으며, 아베 총리가 최근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을 재 거론한 것에 대해 '꼼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악의적인 日도발 선 넘어...일제만행 부각 다각대응>(1/28,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자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하던 과거와 달리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단을 동원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음.



- 다른 나라와 일본 제국주의 침탈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겠다는 정부의 28일 방침은 그 대표적 사례로 분석되며, 정부의 이런 정면 대응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식민 지배의 첫 희생물이고, 일제 피해국이 넓다는 점에서 공동연구로 일제 만행에 대한 국제 사회 여론이 환기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 나아가 다음 달 8~9일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심포지엄 등과 같은 민간 주최의 연구나 세미나도 정부의 국제 공동연구에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큼.
- <日관방장관 "일본측 위안부만화 철거 극히 유감">(1/31,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일본 작품이 철거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만화제에서 기획전을 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은 대항조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현지에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한편,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주최측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위안부 특별 기획전을 취소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폈다고 공개했으며, 이어 일본의 맞대응 위안부 왜곡 만화전을 철거까지 했음.

라. 미·중 관계

- <데이비스 "중국과 北 내부상황 놓고 장시간 논의">(1/28,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회담 결과를 전하며 '장성택 사건' 등을 포함한 북한 내부 상황을 놓고 중국 측과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음.
 - 그는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6자회담을 포함해 북한에 관한 모든 이슈를 논의했다며 특히 탈북자 문제에 있어 중국 측에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음.
 -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회담에 복귀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인 회담 재개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소덕'이 없었음을 내비쳤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중 쌍방은 한반도 형세와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유관문제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데이비스 대표의 방중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했음.



마. 마일 관계

- <“바이든, 야스쿠니참배 자제 직접 요청…아베 거부”>(1/29,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회담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를 요청했으나 아베 총리가 거부했다고 보도했음.
 -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12월 6일 서울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고 함.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참배 여부는 "내가 판단한다"고 거부했으며, 바이든 총리는 "그렇다면 총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물러섰다고 전해짐.
 - 일본 외무성은 당시 전화회담에 대해 중일,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설명했으나 야스쿠니 관련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일본을 방문할 경우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초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예상했음.

- <美日, 북한의 비핵화 구체 행동 중요 확인>(1/30,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음.
 - 통신은 데이비스 대표는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이 하노이에서 극비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포함, 아베 정권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대응 방침에 대한 설명을 일본 측에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일본 외무성은 이와 관련, "납치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美관리 "中방공식별구역 확대하면 군사태세 바꿀것">(2/1, 연합뉴스)
 -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31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또다시 ADIZ 선포에 나선다면 미군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태세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국제문제를 두 슈퍼파워(G-2) 틀 안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음.
 -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서를 포함한 남중국해 상공에 새롭게 ADIZ를 선포하는 어떠한 조치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를 겨냥해 ADIZ를 새롭게 설정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 한편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이익 및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첫 번째 국가를 꼽으라면 일본이다"고 말했다.

바. 중일 관계

- <아베 "中 경제변영 누리려면 주변국과 신뢰 쌓아야">(1/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비 확장은 경제 성장이나 변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경제 변영을 계속 향유하려면 국제적으로 긴장 관계를 만들기 보다는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의도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세계는 일본의 영해·영토와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 같은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중국이 과거 20년간 매년 군비 지출을 약 10%씩 늘려왔다고 지적하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고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 <중국, 공군 위주 對日 전투계획 수립<군사전문가>>(1/27, 연합뉴스)
 - 2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황둥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해 5월 새로운 대일 전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면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도 이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 때문에 원래 중국군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해군 위주의 전투계획을 짰지만, 공군 위주로 계획을 바꿨다면서 이후 공중에서 양측의 마찰이 잦아졌으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 회장은 5년 내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것이며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중국 외교학원 일본연구센터의 저우용성 부주임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의 제약이 있는 만큼 양측이 개전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국, "다오위다오 고유영토" 日 교과서 지침에 반발>(1/2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8일 일본이 센카쿠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히 항의했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도발을 중단하고 정확한 역사관으로 젊은 세대를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



- 질적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양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적절하게 처리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 <中 "日 전쟁단초 제기"...'항공기 강제착륙계획' 비난>(1/31, 연합뉴스)
 - 중국외교부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강제로 착륙시킬 계획이라는 일본매체 보도에 대해 "일본이 한편으로는 대화와 '평화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 군비를 확충하며 전쟁의 단초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어 일본정부가 즉각 관련보도에 대해 책임 있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민약 일본이 대담하게 더욱 사달을 일으킬 경우 중국은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29일 일본이 센카쿠 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하게 하는 항공자위대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日방위성 보고서 "중국 해양조직 통합 경계해야">(2/1, 연합뉴스)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방위연구소는 중국의 중장기 군사동향을 조사한 연차보고서 '중국안전보장 리포트 2013'에서 중국이 작년에 해상보안기관을 통합한 것에 관해 "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여러 국가가 경계해야 할 동향"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이 국가해양국 산하 4개 부문을 통합해 만든 해경국의 형태나 권한 관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해양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 아울러 해양관련 기관의 통합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대화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해군, 지중해서 첫 합동 군사훈련>(1/27, 연합뉴스)
 -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러시아의 2만5천급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인 포트르 벨리키함과 중국의 4천급 호위함인 연청함이 지난 25일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 중러 해군이 지중해에서 이런 방식의 긴밀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테러 위협 대응, 해상 구조 훈련, 작전 공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함.
 - 러시아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양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여러 해역에서 합동으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 7일 포트르 벨리키함과 연청함은 폐기 대상인 시리아 화학무기를 공해상으로 운송하는 작전에 덴마크, 노르웨이 군함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음.

아. 기타

- <일본·인도 안보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 포석>(1/26, 연합뉴스)
 - CNN 등 외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안보 협력 강화라면서 이는 '중국 견제'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음.
 - 인도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제 수륙양용기인 '신메이와 US-2' 구매 및 공동생산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인도·미국의 '말라바' 해상 군사훈련에도 일본 자위대를 초대하기로 했음.
 - 또한 인도와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 간 정례 협의체 설을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비행자유와 민간항공 안전이 중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음.
 - 일본과 인도는 모두 미국의 핵심 우방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양국 간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임.
- <아베 "외국의식해 야스쿠니 대체시설 만들진 않을 것">(1/2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진행된 정당 대표 질의에서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새로운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외국의 의향을 헤아려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음.
 - 이어 "나라를 위해 싸워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분들에게 존송의 마음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소신을 재확인했음.
 - 역사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호소하고 있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 또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에나 위안부가 있었다'는 NHK 신임회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NHK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계속하면 좋겠다"며 NHK 회장이 그와 관련해 사임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음.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해외 친척방문 요건 완화(자유아시아방송, 1.27)

- 북한당국이 올해 들어 중국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중국 방문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제기.
- 최근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길에 나선 평양 주민소식통은 "중국의 친척을 한번 방문한 사람은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1년 만에 다시 허가를 내준다"면서 "하지만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당국이고 보면 이 조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지적.
- "1년 만에 허가를 내주는 대신 방문기간은 과거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고 덧붙임.
- 방문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과, 친척방문 허가요건이 조금 모자란다 해도 보위부 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고이고 사엽(로비)을 잘하면 친척방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도 제기.
- 이와는 반대로 중국에 있는 친척이 북한을 방문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절차를 거쳐도 북한공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북한에 친척을 둔 중국 조선족들의 공통된 불만.

● 北 신문 "남북관계 바로잡을 책임 南北 모두에 있어"(연합뉴스, 1.27)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민족우선, 민족중시 입장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북남당국에 있다"며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언급.
- 이어 "북남당국은 시대와 역사 앞에 현 비극적 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와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임.
- 논평은 또 국방위 공개서한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남북협력·교류를 폭넓게 할 결심을 표명했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남한의 호응을 촉구.

● 중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적극 지지... "기쁘다"(연합뉴스, 1.28)



- 중국 정부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기쁘다'는 표현을 쓰며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관련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가까운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화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교류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
- 이어 그는 "중국은 남북 양측이 이런 기회를 붙잡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선의를 보이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지적.
- 또한 "상대방이 보낸 이런 선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정세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美 북한인권특사, 케네스 배 석방 위해 방북 타진"**(연합뉴스, 1.29)

- 미국이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북한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짐.
- 교도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킹 특사가 지난 주말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비공개로 만나 배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 장 차석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신 오는 2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한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 차석대사가 킹 특사의 방북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다기보다는 아직 본국에서 분명한 지침을 받지 못한데 따른 '답변 회피'로 보고 있는 상황.

● **美 "北과 직접 접촉...킹특사 당장 방북계획 없어"**(연합뉴스, 1.30)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1년 이상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 중이지만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배씨 석방을 위해 북한이 킹 특사를 다시 초청하면 그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당장은 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
- 사키 대변인은 킹 특사가 아닌 전·현직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 그러나 킹 특사를 보낼 준비는 돼 있다"며 "이 현안에 대한 접촉 및 대화 내용을 세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부연.

● **유니세프 '북한 5살 미만 사망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미국의 소리, 1.31)

- UNICEF는 최근 발표한 '2014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4)'에서 2012년 현재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천 명 당 29명으로, 전 세계 195개국 중 77번째로 높다고 보고.

- 지난 2012년 북한에서는 5살 미만 어린이 1만 명이 사망.
-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990년에 1천명당 44명에서 2000년에 6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2년에 29 명으로 다시 감소.
- 한편 북한에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성을 계산한 산모사망 위험은 670명당 1명으로, 최빈개발도상국의 산모사망 위험 평균은 52명당 1명으로 북한보다 12배 이상 높음.
- 북한의 기대수명은 2012년 현재 70살로 세계 평균인 71살보다 조금 낮음.
- 북한에서는 15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밝힘.

2. 북한인권

- **민주, '햇볕정책 2.0' 본격 공론화...의견수렴 진행(연합뉴스, 1.27)**
 -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대 당이 국민의 관심사를 의제화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다"며 기존의 반대에서 벗어나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김.
- **최경환 "2월국회서 기초연금·北인권법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1.28)**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2월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전략과 관련,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
 - 북한인권법과 관련 "민주당도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걸으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은 물론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전날 정부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언급,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

3. 탈북자

- 특이 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정부, '2월17~22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제의(연합뉴스, 1.27)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
 - 정부는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함께 실무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입장 전달.
 - 김 대변인은 상봉일을 2월 중순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금강산 현지에서 상봉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일정을 잡는데) 한미군사훈련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
 - 또한 "이산가족 상봉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동절기에 행사를 치르는 것인만큼 난방 문제가 없는 금강산, 외금강호텔이 숙소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
 - 상봉 대상으로는 지난해 추석 계기 상봉행사 준비당시 합의된 남북 각 100가족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가 추진될 것임을 확인.
 -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하고, 추가상봉 문제나 화상상봉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접촉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황우여 "이산가족 상봉인원 최대한 많이 해야"(연합뉴스, 1.27)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 기간과 횟수를 늘려서라도 상봉 인원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
 - 황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 통일위원회와 오늘 출범하는 여의도연구소 통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통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소통을 위한 통일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김한길 "금융거래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연합뉴스, 1.27)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 김 대표는 "상봉 신청자들이 연세가 많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상봉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이어 "이번 상봉 재개를 계기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이뤄내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주문.

● **北 '2월 이산상봉' 무반응...내일 실무접촉 무산(연합뉴스, 1.28)**

- 북한이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제안에 28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9일 열자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사실상 무산.
- 북한은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연장 근무를 먼저 제의했지만, 오후 6시10분께 "오늘은 전달할 내용이 없다. 철수하자"고 우리측에 통보.
-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이 이날 전달되지 않은데 대해 "자기들 내부 입장 조율이 덜 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
- 북한의 무응답으로 내달 17일부터 상봉 행사를 진행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무준비는 2주일 정도면 된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 **정부, 이산상봉 北 진정성 촉구..."핵무기 진전 유감"(연합뉴스, 1.30)**

- 정부는 30일 긴급브리핑에서 발표한 '이산가족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2월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제시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나흘째 침묵을 지키는 북한을 비판.
- 정부는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

5. 납북자

● **6·25 전쟁 당시 납치된 납북자...서울대 교수 7명 포함 265명 추가 인정(채널A, 1.27)**

- 정부는 심사를 거쳐 김시창, 신성우 등 서울대 의대 교수 7명을 포함하여 모두 265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
- 이 가운데는 제헌국회 의원인 이인출 씨, 서울지방법원 판사였던 곽순희 씨 등도 포함.

● **일본인 납북자 가족, 일본 정부에 사태 해결 촉구(미국의 소리, 1.28)**

-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들은 26일 도쿄도 외곽 사



던 것은 북한에 국가재난대응팀(national DRT)과 각 도에 지역재난대응팀(provincial DRT)을 구축해 홍수 피해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의 90% 이상에게 두 차례 연수회를 통해 비상 대응 기술을 가르친 덕분이라는 설명

- 또 이동 정수기의 제공과 위생 교육을 통해 북한 내 수해 지역에서는 산모 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이 50% 가량 감소했다고 언급
- 식수와 위생 지원으로 평안남도 안주시와 평안북도 태춘시의 수인성 질병이 지원 투입 후 즉각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
- 하지만 이 기구는 북한 홍수 지원 시 도로, 다리 등이 미흡하고 전기 공급이 끊겨 외곽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지적

● 프 NGO, 3월부터 대북 지원 확대(자유아시아방송, 1.31)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가 오는 3월부터 북한에서 운영하는 염소 농장 4곳의 시설을 확장해 영양 부족상태인 취약계층 3만여 명에 식량과 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
-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오는 3월부터 황해남도의 4개 지역에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
- 베노리엘 담당관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원 시설이 들어설 곳은 프리미어 위장스의 염소농장이 있는 농촌이라고 설명
- 지원 시설에는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의료기가 설치되고 지역 보건소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자료와 정보기기들이 갖춰질 예정
- 베노리엘 담당관은 황해남도에서 운영 중인 4곳의 염소농장에서 생산된 치즈로 어린이 1만 5천 명을 포함한 인근 지역 3만여 명에게 동물성 단백질 지원, 두유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지원한다고 밝힘.
- 프리미어 위장스는 염소 사육법을 전수하기 위해 최근 북한 농민 대표들을 프랑스로 초청해 프랑스의 대표적 농촌에서 염소 사육 연수 진행

8. 북한동향

- 특이 동향 없음.